

일본의 탄소시장 활성화 정책

자주참가형 국내배출량 거래제도와 저탄소 투자 촉진법



2009년 9월, 54년만의 정권교체라는 역사를 만들어낸 일본 민주당. 수장인 하토야마 총리는 이 정권교체 이후 최초의 공식적 국제회의인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해 “(일본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25% 줄이겠다”는 선언을 강한 어조로 발표하며 국제사회로부터 큰 박수를 받은 바 있다. 단, 일본은 이 선언을 기점으로 녹색 정책에 힘을 실기 시작했다고 보기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가전제품 에코포인트제도, 가정용 태양광발전 매입제도, 친환경차량 감세 제도 등 2009년 이후 쏟아지기 시작한 친환경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더디어 올 4월부터 도쿄도는 도내 소재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삭감 의무를 부여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배출삭감 의무는 머지않은 미래에 대부분의 기업이 대상이 될 만큼 배출권거래시장이 활성화될 날은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일반 소비자들의 ‘친환경화’를 돕기 위한 상기 제도들이 가시적인 성과와 함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친환경화를 위한 제도 정비 또한 차곡차곡 진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예가 2005년부터 환경성에서 실시해온 자주참가형 국내배출량 거래제도와 올 5월 성립된 에너지 환경적합제품의 개발 및 제조를 실시하는 사업의 촉진에 관한 법률(저탄소투자촉진법)에 근거한 저금리융자지원제도와 리스보험제도일 것이다.

1) 자주참가형 국내배출량 거래제도
(JVETS : Japan's Voluntary Emissions Trading Scheme)

일본 정책의 세부내용

일본 환경성에서는 2005년부터 일본에서는 최초로 시도하는 캡앳트레이드(Cap And Trade)형 배출량거래제도인 자주참가형국내배출량거래제도(JVETS)을 실시하였다. 이 JVETS의 참가자는 목표보유참가자로 분류되며, 이중 온실가스 배출삭감목표에 응하면서 교부되는 배출할당량 외에

에너지절감설비 도입을 위한 보조금이 지급되는 기업과 보조금 없이 배출삭감을 약속하는 기업으로 나뉜다.

참가자는 1년 후 목표를 상회하는 온실가스 삭감을 달성한 경우, 초과분을 목표달성 못한 다른 참가자한테 매각할 수 있고 목표 달성을 못했을 경우는 다른 참가자로부터 배출권을 구입하여 목표를 달성하거나 목표 미달분 만큼의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 제도에 참가한 모든 사업자에게는 온실가스 총배출량 목표가 부여되는데 보조금을 받을 경우는 과거 3년간의 배출량 실적의 평균치에서 산출된 기준연도 배출량으로부터 보조금을 통해 도입한 시설투자의 효과 및 기타 대책을 통한 배출삭감 예측량을 제외한 배출량이 목표로 설정된다. 한편, 보조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기준연도의 배출량으로부터 적어도 1%는 삭감한 배출량이 목표로 설정된다. 아울러 보조금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조건은 ‘10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삭감할 것’인데 일본 정부는 제도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채택하여 지원하고 있다.



출처 : 환경비즈니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정짓기 위해 제3자 검증에 필요한 50~100만엔(1회)의 검증비용을 부담하는가 하면 배출량 거래 시의 배출권 등의 이동이나 관리가 유용한 ‘등록부 시스템’, 에너지 구입전표를 활용하여 사업자가 기준연

도와 실시연도의 배출량을 산정, 등록하는 ‘배출량 관리시스템’, 배출권 거래를 위해 기업간 매칭이 온라인상으로 가능한 ‘GHG-trade.com’ 등 여러 시스템을 갖춰 JVETS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현황 및 전망

환경성이 지난 2월 이 자주참가형국내배출량거래제도(JVETS)의 제3기 사업(2007~2009.8) 종료에 맞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목표를 설정하면서 참가한 61개사가 당초 13만6,410톤의 이산화탄소 삭감을 약속한 것에 대해, 실적은 38만2625톤을 기록한 바 있다. 한편 배출량 거래는 총 23건 이뤄져 거래량은 3만4,227톤으로 평균거래가격은 톤당 800엔을 기록하였다.

환경성 지구환경국 지구온난화대책과 시장메카니즘실 담당자는 ‘2005년~2006년의 경우 배출량 거래의 활성화가 진행되면서 전 참가기업의 삭감목표는 달성되고 있다’며, ‘덕을 이 참가기업 전체로 봐도 목표 이상의 온실가스 삭감을 달성하고 있어 온난화대책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고 밝혔다.

2) 저탄소투자촉진법

정책 세부내용

올 5월 제174회 국회에서 통과된 ‘저탄소투자촉진법’은 대규모 투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융자지원’과 중견·중소기업의 에너지절감 설비 도입을 촉진하는 ‘리스제도’로 나뉜다.

태양전지 등 특정 제품을 개발, 제조하는 기업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및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것이 첫 번째 골자로, 총 융자금모는 1,000억 엔이다. 정부가 지정하는 민간 금융기관이 재정투자기관인 일본정책금융공고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융자해준다.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대신(재무부장관급)에 제출해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 융자의 대상이 되는 분야는 ‘에너지 환경적합제품’으로서 정부가 지정하는데 대상은 태양전지, 전기자동차 2차 전지, LED조명, 열전병급(CHP: Combined Heat and Power) 시스템, 원자로 등이 대상이 된다.

두 번째 리스보험은 온실가스 삭감에 기여하는 설비 보급 확대가 목적인 제도로, 저금리 융자의 대상이 대기업이 추가 된다면 이 리스보험의 대상은 중소기업이 추가 될 전망이다. 에너지 절약형 설비를 임대하는 리스회사는 정부의 지정법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지불한다. 경기의 악화로 리스회사에 대한 보험료의 보험료 지불이 확대되는 등의 사태에 대비해 정부는 자금을 지원한다. 경제산업성은 2010년도에 80억엔의 예산을 이 사업에 적용한다.

경제산업성은 보험을 통하여 리스회사의 리스크를 경감시켜, 사업실적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리스계약도 체결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보조금을 활용하여 리스요금 자체를 인하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는 있었으나, 이 방법으로는 중견기업들의 신용도를 높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리스를 이용한 도입의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

리스 보험제도의 대상은 저금리 융자 지원제도와 대상이 대동소이한 대신, 국가의 인정을 받는 등의 조건은 없고, 대상제품의 리스계약이 존재하면 보험의 대상조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설 제도 내역

신설제도	저금리융자지원제도	리스보험제도
지원대상	태양전지, 전기자동차, 2차전지 등 개발 및 제조	고성능공업로, 고효율 보일러, 에너지절약형 업무용 냉방기 등 도입
지원내용	대상제품을 개발, 제조하는 기업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장기로 융자	대상제품을 리스하는 기업에 대해 리스요금의 회수가 불가능해질 경우 일부 보전
예산	1,000억 엔	80억 엔

출처 : 닛케이 에코로지

시장현황 및 전망

태양전지나 전기자동차, 2차전지 등은 일본기업이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수요확대가 전망되고 있다. 한편, 구미 등 각국 정부는 환경·에너지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일본으로서는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신규시장 개척 등의 확대가 필요한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전지나 전기자동차와 같은 제품은 생산설비 면에서 투자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회수기간의 장기화가 초래되어 자금 조달 또한 용이하지 않다는 난점이 존재한다.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여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이 저탄소투자촉진법이라 할 수 있겠다.

지난 6월 간 나오토 총리가 새롭게 취임하면서 향후 환경 정책의 수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쿄도에 이어 오사카시와 사이타마현도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빠른 시일 안에 일본은 전국적인 배출권 거래제도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출권거래의 일본내 시장 확대에 따라 일본 중소기업의 배출량 거래를 추진하는 것까지 제도가 정비되고 있다. 각 제도에 따른 장, 단점을 파악하여 기업사정에 맞는 적절한 수단의 취사선택이 일본 기업에게 요구되고 있다.